

“주변지역 범위 30km로 확대하라”

부안·고창 등 전국원전동맹,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안전 외면” 비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후폭풍이 전북에서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강력한 입장 발표와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전북 지역 도의원인 김경직 김만기 김승지 의원과 부안·고창 지역 군의원인 임정호 조규철 군의원 등은 정부의 현행 법 시행령이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과 실질적인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원전 인근 주민 동의와 공문화 절차를 생략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치 시한을 ‘노력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둔 것은 결국 임시 저장시설이 장기 보관을 넘어 영구화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며, 자연현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변 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한 것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들이 원전 영향을 직접 체감함에 따라, 현행 법령이 5km만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위험과 불안에 겪는 주민들이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로 확대되었음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5km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관련 법령의 불일치로 전북 부안·고창을 비롯한 4개 지자체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변 지역 범위 5km → 30km 확대 △실질적인 주민 동의 절차 의무화 △영구 처분시설 설치 시한 강행 규정화 △정책 공백 지자체 예산 지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등 5대 개선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협의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원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생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리고 “원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 5km 기준은 1989

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발전소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으로 “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면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안전사고 이후 변화된 원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은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주변지역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 지원시설세가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되었다”면서 “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기자 고창=김영식기자

남원시의회 예결특위 제3회 추경 심사 착수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지홍)가 18일, 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남원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1,830억원이며, 시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세입 여건 감소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 안전 및 민생 회복과 직결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는 22일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23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균형발전 길 밝히는 이정표”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토대전 시상식 열어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모범사례 선정·시상
순천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대통령상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을 열고 국토경관·디자인 분야의 모범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국토가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K-컬처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국토 경관을 충분히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꿀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앞에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숙제가 있다. 지방도시 명소가 되고, 지역명소는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된다”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순천 저전골 마을처럼 지역 특성을 살려 정원 마을로 특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람이 찾는 장소는 지역 명소가 되고, 지역명소는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된다”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순천 저전골 마을처럼 지역 특성을 살려 정원 마을로 특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통령상 수상작인 순천시

저전골 마을을 언급하며 “다나무 밭이라는 이름을 살려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 마을호텔과 청년주택까지 조성해 잊혀져 가던 마을이 사람이 찾고 머무는 마을로 거듭났다”며 “오늘 수상한 작품들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오늘 국토대전이 균형발전의 길을 밝히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상자 여러분의 기쁨을 축하드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 행사로, 국토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6개 학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9개 부문에서 총 24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이 차지했다. 순천 저전동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과거 다나무가 가득했던 지역 특성을 살려 정원 마을로 특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호텔, 청년주택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립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고창 공음, 원전 피해만 누적...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임정호 고창군의회 “지원 체계 전면 손질해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이 원전 인근 지역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정호 전 고창군의회 의장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창군 공음면은 원전에서 불과 5.2km 거리에 있는 가장 큰 피해 지역이지만, 정부로부터는 실질적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의원은 “공음면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력 송전선로와 고압 첩합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방사능 대피훈련과 갑상선 약품 비축까지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원전 운배수 피해로 어업 기반이 약화되



고 농업 환경도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공음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풀이 하듯 쏟아냈다. 실제로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은 매년 500억~60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고창군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3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능 위험이 고창 공음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재지 중심 지원’ 원칙만 고집한다”며 “이로 인해 공음면

민들은 피해만 입은 채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공음면에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28만 9천 볼트가 넘는 고압선 첩합이 지나가는 반경 700m 안에 살고 있음에도 보상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공음면 지역 학교 학생 수는 계속 줄어 지역 소멸 위기가 머지않았다”고 호소했다.

공음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는 9명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4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정호 의원은 “원전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주민들, 농촌주민수당 시범지역 선정 촉구

“정부 정책 발맞춰 준비된 곳”

이재명 정부에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수당’ 제도 시범 시행과 관련해 임실군 주민들이 발 빠르게 나섰다.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진명) 소속 김진명 상임본부장과 회원 50여 명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농촌주민수당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회원을 대표해 김진명 상임본부장과 황호은 대표 등 4명은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3년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쳐온 운동의 결실을 맺고자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 임실군이 ‘가장 준비된 곳’임을 역설했다.

임실군은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 5천 명이 감소하여 50년 안에 기초단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김진명 상임본부장 등 50여명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임실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년 전부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를 운영해 왔다. 이는 민간 주도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위한 단체를 운영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임실시장을 방문했을 때 ‘농촌주민수당’ 공약 채택을 요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민수당’을

공약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임실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고, 8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임실군의 제안을 국정과제 및 소관 부처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오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보충하여 임대

청년후계농, 2030세대, 우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성숙대상자, 청년후계농(창업농,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최장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매도조건부 임대 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

농지임대주택사업
• 자력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